

특집

21세기 국민승리를 위해

인터뷰

국민승리기 권영길 후보에게 듣는다

Bulletin, No. 10

월간 『노동사회』가 9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승리21의 권영길 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향후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건설을 이끌어 나갈 주체임을 선언한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의 출범과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통령선거 출마는 한국 민주주의와 민중운동의 중대한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 바쁜 중에도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 깊이있고 의미심장한 답변을 해준 권영길 후보와 국민승리21의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선거전에서의 감동적인 승리와 건투를 기원한다. -편집자

1. 성장과정, 가족들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권영길 후보가 민주노총의 위원장이고 기자 출신이라든가 하는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만을 알고 있거나, 심지어 아직도 출마한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도 권 후보의 성장과정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권 후보의 가족사나 성장과정에 대해서 공개하실만한 내용이 있다면?



경남 산청의 산골 출신입니다. 촌놈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인생은 순탄했습니다. 군동에서 공부 잘한다 소리 들었고, 그래서 부산으로 학교를 갔었습니다. 이른바 골수 PK라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경남중,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갔었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하고 연애도 하고, 군대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취직하고도 큰 변화는 없었지요. 하지만 그러다가 다 늦게 노조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고 참으로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조직의 위원장과 대통령후보가 됐다는 사실을 뵈면 아주 큰 우여곡절은 없는 삶이었다고 봅니다.

성장과정에서는 알게 모르게 농부이셨던 아버님과 할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해방직후 이승만 정권의 남한 단정론에 맞서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으신 아버님을 저와 저희 가족은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께서는 성실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철한 민족관, 역사관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실천을 해나가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려운 그때 농촌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농촌계몽운동가가 되고자 하려고 꿈을 갖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보면 얼마쯤은 어린적 꿈을 이뤘다고 봅니다.

딸 하나에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 큰애만 시집갔고, 얼마 전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5분쯤 들여다본 것을 제외하면 제대로 얼굴도 못 봤어요. 아

내는 꿈계 자란 사람입니다. 지금도 참 곱고 착한 심성을 갖고 있어 어려운 일도 많고, 심심한 일도 많을 텐데 내색하지 않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모님이 반대하는 시집와서 흠시어머니 모시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내 이리다 늘그막에 안 사람에게 구박받는 것은 아닐지 몰라요 (웃음)

그냥 전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오히려 늦깎이지요. 남보다 늦게 운동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계게 주어진 역할이 대통령후보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후보



권후보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자로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와 정치인은 성격과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노조지도자와 정치인이 같을 수는 없지요. 전 직업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즉 정치가 이외에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자긍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맘 흘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다른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살지 않는 이른바 '꼰' 같은 정치인은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면 이 땅의 정치인들이란 사람들은 정말 프로근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도 없고요. 정치가 본질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다. 난 국민들에 의해 선택되었고 그들의 평가가 내겐 목숨보다 중요하다. 자긍심이 없습니다. 요리사는 자기가 만든 음식이 세계 최고라는 자긍심이 있어야 천천히 알고 살아가며, 또 대물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까? 도대체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손 벌린다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 어비규관 통인 정치 관에 뛰어들다는 것이 꼭 흡족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제도권에 발을 들여 놓지 않고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대안의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저와 우리 국민승리21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정치가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치가라는 직업이 오명인 이 시대에 참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이 '정치가 보다'는 '운동가'로 불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3.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 한국노총 조합원들 중에는 대선 후보들 중 권영길 후보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후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국민승리21과 제가 내세운 정책과 공약은 한국노총의 요구수준을 뛰어넘으면 넘었지, 못 미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제가 정책연합의 대상에서조차 거론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한국노총 지도부를 뺏아주기보다는 설득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슴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진정으로 지켜줄 다른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왜 또다시 보수정객들의 거짓말에 노동자의 삶을 의탁하려합니까.”라고 열 시간이고 백시간이고 불붙고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노총도 어쨌든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단체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회사가 부도날지, 언제 쫓겨날지 전전긍긍해야하는 세상,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마저 처압당하는 세상을 다른 어느 누가 바꿔준단 말입니까.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저와

국민승리21의 참 뜻을 안다면 거리낌없이 지지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초라해도 제 힘으로 만든 집 한 칸이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은 궁핍이듯 우리들의 정당도, 우리들의 정치도 그 첫 발은 힘겨울지라도 어느 정당 안 부러울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미래를, 우리들의 희망을 바라보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권, 영, 길 이름식자보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진출’이라는 미래를 보고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4. 현 정치정세에 대한 진단

? 국민승리21은 1997년 대통령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민주와 반민주 혹은 보수와 진보와 같은 의미부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정권교체나 세대교체나 하는 다른 후보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후보의 성격(정치성)을 뚜렷이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와 함께 국민승리21의 출범과 권 후보의 출마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민승리21이 이번 대선에서 내놓고 있는 대통령 선거의 주요 슬로건은 “미래를 위한 세력교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정권교체, 자격 없는 세대교체보다 세력교체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5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보수일색의 정치는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망

치고, 국민들의 가슴에 명만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처한 총체적인 위기는 대안제출이 금지된 폐쇄정치환경이 만들어 낸 필연적인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승리21로 표현되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세력이 트디어 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나 몇 사람이 아니라 한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켜온 소위 '재야' 전체가 조직적으로 결의하여 함께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승리21 출범과 제 출마가 지나는 가장 큰 의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국민승리21이 가지는 뚜렷한 차별성은 바로 '진보'라는 두 글자입니다. 물론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가를 평가해 본다면 민주대 반민주의 전선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보수대 진보'의 개념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보수일색인 우리 정치환경에 진보의 새바람 심으려는 우리들의 노력 그 자체가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다양한 의견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인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할 것입니다.

5. 민중후보와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

? 국민승리21의 결성은 한국 민중운동에 있어서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이 자유주의 세력으로부터 본격적인 독립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87년과 92년의 대통령선거 혹은 그 사이에 있었던 총선 국면에서의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가 있을 줄 압니다. 국민승리21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운동과 흐름도 이전의 역사와 단절된 독립적인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보수정치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후보, 독립된 정치세력이라는 점에서 국민승리21은 민중당 운동의 취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운동권 후보, 일부 단체의 후보, 자기만족적인 활동을 하는 후보가 아니기에 저와 국민승리21은 과거 민중당 운동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과거 진보정당 운동은 자기를 드러내 남들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운동이었다면 이번 국민후보운동은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지난해을 총파업을 지지했던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후보입니다. 조직적 결정으로 나를 추천한 모든 단체들의 목적은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참가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로써 선거운동을 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승리21과 저는 과거의 진보정당, 민중후보운동의 취지는 살리되, 그때 보였던 문제점을 철저히 비판하고 지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

거 과정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스스로의 삶과 운명을 책임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습니다.

6. 민족민주운동의 단결

? 민족민주운동 진영 내부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견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통합을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정치세력화 혹은 정당건설에 있어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승리21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물론 현재 진보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국민승리21로 모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 조건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DJ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일부 인사들을 제외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민승리21로 모여 있다고 봅니다. 생업에 매여있거나 아직까지 지회들과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다 모으지는 못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들이 들어올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민승리21은 결코 다수견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오만하거나 소수의 견해를 폄하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를 격해이나 의견에서 배려하고 포용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견해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날 든든한 진보정당의 건설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운동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파주의자와 출세주의자는 사절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를 앞세우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승리21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7. 정권교체 우선론에 대해

? '국민승리21'의 결성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의 결의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두부충실하게 넘어간 인상이 짙습니다. 물론 선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유동적인 전술을 필요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 정권교체의 유의미성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무려 50년간 모든 것을 지배해온 보수세력이 정권과 기득권을 잃는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임은 분명



총파업투쟁 당시의 관영집 후보

합니다.

그러나 그 정권교체의 주인공들이 지난 세월 그 기득권 세력들이었고, 국민을 독재의 수렁에 빠뜨려놓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기형적 정권교체'이거나 '거짓 정권교체'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분들도 이런 정권교체를 바란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쿠데타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를 거꾸로 돌려도 유분수지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DJP로의 정권교체는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에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바뀐 것은 민간인이 집권한다는 의미라도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야당출신 민간인이 집권하고 있는데 또다른 야당출신 인사가 집권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이 달라야 진정한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색깔시비와 지역성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자로 들어가면서까지 대권을 구걸하는 김대중씨의 모습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 김대중씨가 민주화의 무사로 영원히 남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 선 그 사람이 자신의 명예와 옛동지인 우리들의 자존심을 위해 은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 국민승리의 정치이념



? 한국의 민주주의는 분단과 냉전, 그리고 군부의 쿠데타와 장기집권이라는 최악의 조건속에서 대단히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런 체제가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이념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승리21’은 어떤 정치이념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 국민승리21의 정치이념은 ‘일하는 사람이 정치의 주체로서는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이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

니다. 또한 아직까지 창조적 영역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전보전영의 정치세력화를 선부르게 계단했을때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승리21은 00주의라고 꼭 짚어서 이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 역사상 많은 이념들이 실험되어 왔고 지금도 시험중인 나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딱 떨어지는 모범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류나 시행착오 없는 체제나 이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러기에 국민승리21은 자신의 이념을 서구나 다른 어느 나라 혹은 정당의 이념과 혼동하기 쉬운 그 무엇을 차용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우리의 준비는 많은 부분 부족합니다. 성급하게 무엇인가 완성된 형태로 제시하기 보다는 당면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하는 정치의 주체로 서는 민주복지국가 건설입니다.

9. 진보정당 결성 계획

? 국민승리 21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차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정당 작업의 완급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 이후의 활동계획을 미리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국민승리21과 저는 과거 민중당 운동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은 선거가 끝나면 해소될 수 밖에 없었던 민중당의 한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진보정당 건설은 역사의 추세이며, 한국 민주진보진영의 한단계 진전과 노동자운동의 획기적인 발전인 것입니다. 또한 국민승리21과 저는 내년 지자체 선거, 2000년 총선을 내다보면서 올해 대선 전술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승리21과 저는 대선결과에 상관없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질문하신 것처럼 대선결과에 따라 완급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대선과정에 따라 완급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활동의 영역과 내용이 다른 민주진보진영의 계 단체, 세력이 결집된 국민승리21의 활동자체가 다양한 차이를 포용하고, 새로운 진보를 피어가는 활동인 것입니다. 그 과정의 어려움은 바로 민주진보진영의 진보정당 건설의 완급에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대선이후 선거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더욱 폭넓은 민주진보진영의 단결이 어떻게 이뤄지느냐, 또 어떻게 이뤄야 하느냐에 따라 완급이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승리21은 그 모든 과정에 '정치세력화'의 열의와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폭넓은 연대의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10. 민영화에 대해서



몇가지 정책과제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기업들의 민영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영화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안에 이루어진 민영화에 대한 국민승리21의 평가와 앞으로 민영화 예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당초 민영화라는 말은 영국 대처 장관 시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대처 총리는 '부실한' 공기업들 독점기업들에 특혜를 주면서 팔았습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는 부담은 조세와 노동자해고라는 '철혈장복'으로 해결했지요. 결국 결국 부실한 공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영화를 한다는 미명하에 납세를 담당하는 국민과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보수주의가 유행하면서 정부는 영국의 전례를 따라 1993년 12월에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총133개 공기업 중 68개 공기업을 민영화대상으로 선정하여 1998년까지 순차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경제주체는 사실

재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공유기업들을 재벌들에 불하하고, 국민의 혈세로 특혜적인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주면서 노동자의 해고를 보장하는 민영화를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공기업들은 내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제적 특성, 그리고 낙하산식 인사 등으로 인해 심각한 내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공기업이 현재와 같이 국가가 통제하여, 관료들의 이익을 보장하며 정치권력자의 자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되어선 안 됩니다.

공기업이란 말 그대로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만큼 공기업은 국민의 참여와 경영아래에 놓여져야 하며, 그럴 때 비효율성도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공기업을 국민주+종업원지주제+전문경영체제로 국민기업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을 개혁하는 방안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영자문화 방안 등도 공기업 개혁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공기업 개혁의 방안을 국민과 노동자의 의견에 따라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전문성을 갖춘 민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부 및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민영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공무원 이외에도 재계 및 노동계 등의 이해당

사자와 학계, 시민대표 등의 공익대표를 동수로 구성하고, 민영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II. 경제정책의 원칙

? 경제정책에는 어떤 것을 우선 순위에 두느냐 하는 가치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 후보는 이른바 국가경쟁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조세와 정부지출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경제위기는 경제운임을 책임져온 정부관료와 재벌들의 국가경제 운영 및 기업경영방식의 한계 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지가 고금리, 고품류비용, 임금상승 등 고비용과 저효율 구조도 토지소유자, 금융자산 보유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했던 분배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비재 수입이 확대되고 해외유학생이 급증하는 것은 분배구조의 악화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발언권을 높여주지 않고 수동적인 존재로만 취급함으로써 그들의 능동성과 창의성 발휘를 억압한 것도 효율 향상을 저해해왔습니다. 여기에서다 개혁의 과도한 추진으로 수입이 확대되고 외국 서비스자본이 급속 진출


하며, 국내자본의 해외투자가 확대된 것이 위기 심화를 촉진했습니다. 경제위기의 원인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부정부패에 있다는 자본측의 주장은 일면적이며, 더구나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조합의 힘 비대화에 있다는 주장은 오류인데요, 오히려 노동조합의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심화된 것이지요. 따라서 고용안정과 경기 회복, 환성화가 당연한 최대의 과제이며, 자본주의적 모순 해결을 통한 안정과 효율의 달성이 중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은 분배와 참여의 개선을 통해 안정과 효율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분배를 개선하는 것은 안정된 수요기반을 창출하고 과도한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경제 불황을 완화시키고 경제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의 개선은 자산소유자들의 높은 소득을 억제하여 고지가 고금리를 시장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대와 금리 및 물류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효율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가 등 국민들의 경제운영 참여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 관료와 재벌일족들의 독단적 주도와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제운영방식을 종식시킴으로써 경제안정과 효율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는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사회복지의 획기적 확충과 근로소득세

의 인하·직접세·자산소득세 위주의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분배정책을 개선하려 합니다.

12. 노동정책의 방향

 권영길 후보는 정리해고제 도입을 철회시키고 퇴직금제도의 붕괴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승리21의 노동시장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 정책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발언권을 가지고 통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후 예상되는 최대의 노동문제는 실업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부도·도산 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업과 임시고·일고와 같은 불안정 취업의 증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폐지하고, '고용안정 특별법',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를 확충하여 다량의 고용을 창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노동자 자기개발 지원 기금' 신설

로 다기능 고도숙련 노동자의 대량 창출하여 다기능 고도숙련의 습득을 위한 향상훈련, 국내외 연수교육, 위탁교육 등을 받는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대해 그 교육훈련비용의 절반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도입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97년 3월에 개정된 신노동법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경영참가의 길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참가에의 길은 여전히 막혀 있는 실정인데, 노동자 경영참가는 세계적인 추세일뿐만 아니라,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사협의회를 노사공동결정기구화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공동결정기구화된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사항을 생산 및 노동관련 전반에 걸쳐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완전한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교조의 합법화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처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사회복지를 대폭 확충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13. DJP연합

?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만약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요. 김대중씨가 92년 정계은퇴선언을 하고난 뒤 2년을 어떻게 보냈을까하고 말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패인을 고통스럽게 분석하지 않았을까요? '뉴디제플랜'이나 '신4차평등론'에 대해서도 곰곰이 씹어보았을 겁니다. 그런 고통스런 시간이 2년 여 흐른 후 김대중씨는 '국민여론'을 내세워 다시금 정계에 조심스럽게 복귀했고, 박정희 묘를 참배하기도 하고, 박철언 씨와 깊이있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재벌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매우 관대한 '방임'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분서주하며 소위 '수구세력'과 만나왔고 지역주의를 악용하면서 세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뉴디제플랜' 식의 어중간한 보수가 아니라 확실한 보수만이 사회저변에 깔려있으며, 우리나라의 여운주도층이라는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뒤 김대중씨는 과거 한때 '부정'을 함께 했던 민주세력에게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있어요. 물론 민주세력의 요구엔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필씨와 연합하고, 업삼탁 같은 인물을 영입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일관성있게 변해온 과정을 대변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씨는 최근에 변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변해온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김대중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이미 때가 지난 얘기인 셈이죠.


지금 김대중 씨의 주장은 철저하게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고, 시민,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과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해선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사회는 변할 것입니다. 지역주의가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이고, 또한 김대중씨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예술에 대한 정책이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에 비해 지배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적은 김대중씨로선 더욱 어렵게 정치를 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혼자 독식했던 민주계와는 달리 자민련과 권력을 나눠야 하는 실정에서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행정부의 무능이나 행정의 혼란, 정치적 문제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내각제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이 그의 임기기간을 채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보민주세력의 역할은 더더욱 막중해지는 것입니다.

14. 이인제와 조순

 이인제와 조순 후보는 기성정치인이면서 구정치를 타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승리21이 이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인제씨는 신한국당 경선에서 낙선하면서,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이회창씨가 아들의 병역문제라는 암초에 빠져 지지율이 떨어질 때, 한참동안을 망설이며 동향을 주시하다가 지지율을 사퇴하고, 또 이회창씨의 지지율이 거둬 떨어지는 상황을 확인한 후 대선 참가를 결정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를 과연 구정치의 타파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인제씨는 젊고 참신한 사람에 의한 세대교체를 내세우면서도 '박정희'라는 구정치의 명령을 끌어들이며 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신한 것이 아니라, 구시대와의 아합이며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인제씨는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실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낙하산식 정당운영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자리배치와 지분분담으로 국민신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하는 정책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젊고, 참신하다'는 것뿐이며,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박정


회를 숭배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인제씨에게 국정을 맡기는 문제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조순씨는 요즘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연대 후후보결정문을 내세우며 부지런히 이회창과 이인제 사이를 중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반DJ연합의 수장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코메디입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심각히 반대하니까요. 조순씨는 정책과 관례해서도 별다른 게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 역시 기본정책은 거의 엇비슷합니다만, 그가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제3후보론을 주장했던 소경의원들의 청을 뿌리치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래물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에서 대선경쟁에 참여한 것 외엔 없습니다. 그러나 출마한 후 올라가는 듯 했던 그의 지지율은 이인제씨의 출마로 급전직하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김종필씨처럼 연합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순씨가 서울시장을 지내던 시절 지하 천노동자에 대한 단압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을 적습니다. 만약 그것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된다면 그의 친계별적인 경제학도 결국은 민의에 거역하는 것이라는 점이 공인될 것입니다.

15. 남북문제와 통일

2 남북문제에 대해서 권후보는 남북한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남북한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며,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북한 화해를 통한 평화체제 실현을 가장 커다란 대북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 냉전의 오랜 세월을 거치오면서 세계 질서의 청빙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질적인 정치이념과 정치체제로 구성된 강대국들의 긴장을 대리하여 수십년간 왜곡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왜곡된 반세기의 세계사를 바로잡고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라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전보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남북의 정권은 서로가 상대방의 존재를 이용해 체제를 유지하는 '적대적 의존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승만 정권시대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진보당 사건으로부터 김영삼 정권의 전경분사론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는 북한의 존재를 이용해 인권단압과 민주주의 단압에 앞장서왔습니다. 그런가닭에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몇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굶주리는 북녘동포를 돕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어린 이로부터 나이드신 노인분들까지 전국민이 동참한 북녘동포 돕기운동은 북녘동포에 대한 적대감과 이질감을 극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정부를 이를 포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북녘동포를 돕기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북한은 유고에 의한 정상회담 연기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었다라면 정상회담은 자질 없이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정상회담을 연례화시킬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미 조약한 남북합의서를 국회동의를 얻어 법적 효력을 갖게 할 생각입니다. 또한 밑으로부터의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생각입니다. 통일은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하나의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의 주인은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4자회담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남과 북이 소아적 고집을 버리고 남과 북간의 교섭과 북과 미간의 교섭으로 이원화시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북한을 수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지하듯이 북한은 내부적

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화해조성 속에서도 북한에 요구할 것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대외관계와 외교

 대외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교문제는 경제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요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외관계는 해방 이후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한 반공외교의 유산과 함께 탈냉전의 무드속에서 러시아, 중국과 수교하면서 복합적인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선진국 외교는 대단히 동원해왔습니다. 앞으로 건설개혁을 진보정당의 국제관계에 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문제, 세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교의 제1원칙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먼저 미국, 일본 중심의 외교노선에서 탈피하여 중립적인 외교노선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본은 신랄위험력 선언 등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고, 미국은 일본과 역할분담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 경제적인 요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사중심의 외교에서

서서히 경제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교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냉전의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강압적 요구에 굴복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한미간에 맺은 불평등한 조약을 폐지, 개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선 분명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일방의 편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 등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간의 신뢰에 기반한 공동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한국정부는 제3세계 외교를 북한과의 주도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그런 까닭에 미,일 등 선진국 외교에 비해 지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앞으로의 시대는 탈냉전의 시대이며, 각국이 호혜평등에 입각한 외교,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냉전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3세계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제3세계 외교의 비중을 더욱 높이면서, 세계적인 남북갈등문제에 공동대처하며 세계의 연대와 화해를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